

한국 계층갈등의 지형과 공감사회: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

서문기*

Class Conflict and Empathetic Society in Korea: Crisis Management in the COVID-19 Era

Moon-Gi Suh*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비례하며,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양극화를 보여준다. 왜곡된 분배구조와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격차와 계층의 구조화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굴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회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체계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나이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발전을 우선시키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연대의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계층갈등, 불평등, 코로나, 공감사회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class conflict in Korea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an empathetic society.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and class consciousness are in direct proportion, and status consistency signifies polarization. Distorted distribution structures and cultural values make income disparity and property disputes widen, which in turn lead to educational divides and status fixations, refracting or blocking the possibility of social mobility. By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it is not appropriate to go back to the past but to correct wrong consciousness and practices in the past, an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state and members of society must be re-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innovation at the economic, global, and digital level, a major transformation is required in the new normal era, which prioritizes social development for human values. The conflict resolution depends on the solidarity of the community as a social foundation, since an empathetic society needs the trust and communication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Key Words : class conflict, inequality, COVID-19, empathetic society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7S1A3A2067374)이며,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고정재기 교수님과 정인관 교수님, 익명의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mgsuh@ssu.ac.kr)

1. 문제제기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회적 욕구가 분출됨으로써 값비싼 성장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절대적인 파이를 가져다주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수반하여 빈곤층과 소외층을 포함하는 여성, 노인, 청년, 다문화 집단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갈등의 무게도 점점 증가되어 왔다. 특히 소득 및 자산 격차와 같은 경제력 편중의 문제 등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심각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조정의 필요성은 증가하였지만 이를 감당하기에는 사회적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 가운데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집단 간의 간극을 포함하여 차별의 범주가 확대되고 이 안에서 다시 사회가 급속하게 파편화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층갈등의 효과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권위를 붕괴시키고 사회규범의 부재현상을 초래하여 구성원들의 일탈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만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상류계층은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이자 및 이윤의 높은 회수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세와 뇌물 등 각종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정준호, 2019). 엄청난 경제적 소득으로 과시적 소비와 유한 생활, 금전만능주의 등에 매몰되면서 성실한 '무능력자'를 전대하는 역설적인 사회적 가치와 관행을 창출해 냈다(신광영, 2013). 계층적 배타성은 중산층에서 빈곤층에 이르기까지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상류층의 소비행태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급기야 적대적인 저항의식을 심화시켜 갔다. 상품화과정과 배급주의 인식을 토대로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는 편법주의, 한탕주의, 몰신주의 등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나아가 미래사회의 중심축인 교육 분야에까지 갈등 및 파편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장원호 외, 2019).

더욱이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주었으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접종 등이 지체 되면 수년간 지속되어 대유행의 위험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비단 의료 및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계층갈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둘러싸고 이해집단의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사회발전의 전환기에서 정부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회구성원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Nye, 1997). 정부 자체도 불평등 문제를 포함한 계층갈등 등에 대해 충분한 정책능력을 창출, 유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정부의 공공정책의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사회적 권위의 하락과 불투명한 정책수행의 능력은 국가의 위약성을 초래하여 정권의 개혁의지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Ostrom, 1990). 정부가 이 문제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진단 및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때, 갈등의 지속성은 유지되면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더해가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발전의 딜레마는 한국사회의 갈등현상을 이해하는 데 불평등을 배태하게 된 사회구조적 특성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정상적인 소통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연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계층갈등의 존재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한 조정 및 제어 역할을 요구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표출이 되지만, 갈등의 골을 메꿀 수 있는 단초는 근원적으로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재발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의 지형을 규명하고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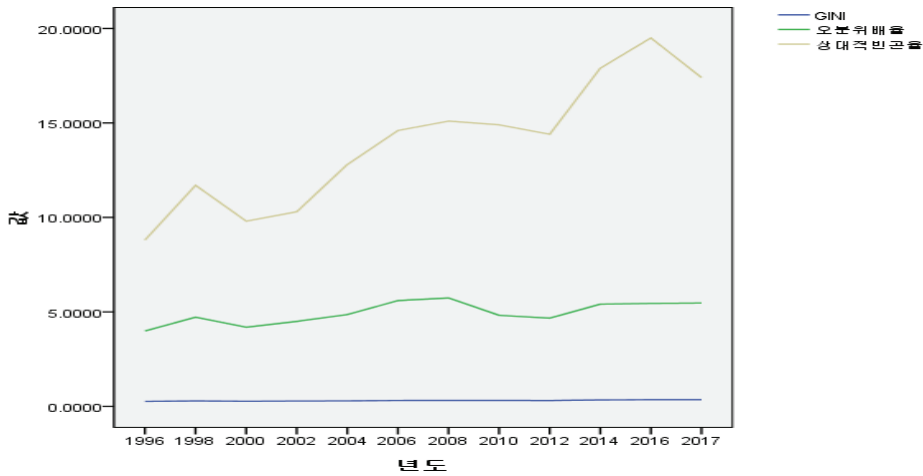


그림 1. 소득분포의 추이

각주: GINI: 도시 2인 이상가구(시장소득기준)

5분위 배율: 상위 20% 소득총액을 하위 20% 소득총액으로 나눈 비율(가처분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시장소득기준) 50% 미만 가구의 상대적 비율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평등의 전개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공감사회에 관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계층갈등의 전개양상

사회갈등의 핵심 영역이 경제적 불평등에 기초한 계층갈등이라면, 한국의 경우 상위 1%가 1996년 7.3%의 부를 가져갔으나 2012년에는 12.3%를 가져가다가 2016년 12.2%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0% 역시 1996년 32.6%에서 2012년 44.2%와 2016년 43.3%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위 10%와 비교할 경우에 2016년 8.62배의 소득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소득구간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상위 1%보다 상위 10%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가 더 크며 이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몫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2000년 이후 소득집중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

의 원인으로는 상위 계층의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소득 등 비(非)근로소득의 편차와 함께 비정규직의 증가,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몰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자영업 가구의 소득불평등(0.492)이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0.425)보다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1>은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3가지 변수에 의해 소득분포의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갈등의 수준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맨 아래에 놓여있는 GINI 지수의 경우 거의 직선에 가까운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변수와의 비교할 때 나타나는 측정크기의 상대적 척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며 국내외 비교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소득분포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김영미·한준, 2007; 서문기, 2014). 여타 변수의 편차를 통제한다면, 지니계수의 효과는 1990년대 .264수준에서 IMF 직후 .327로 높아졌으며 이후 약간의 파동기간을 거쳐 2012년에는 .311을 유지하다가 2014년 .341로 높아지고 2017년에는 .355로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위 소득계층 20%가 하위 소득계층 20%에 대한 비중을 측정하는 5분위 배율은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3.99에서 IMF 시기에 4.72로 크게 증가한 후 2000년에 4.19와 2002년 4.5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2008년 동안 5.74로 급증하였다. 이후 4.82-4.67의 정체기간을 지나 2014-2017년 동안 5.47로 소득분배구조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 미만가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 빈곤율은 여타 지수에 비해 한국사회의 소득분포의 역동적인 추세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996년의 8.8 비율에서 2004년 12.8 수준을 거쳐 2008년 15.1로 급증하였다. 이후 2014년 17.9를 거쳐 2016년 19.5의 크기로 나타나 초기에 비해 2.2배 정도까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비율도 2012년 19.1% - 2018년 17.4% 수준으로 한국사회의 5가구 중 1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2018년 한국 노인층의 절대빈곤율은 76.6%에 달하고 이는 OECD 평균치인 25%의 3배에 해당되며 상대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치인 12%의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사회는 외환 및 금융 위기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격차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층별로 거주지가 분리되고 사회자원이 편중되는 등 계층갈등을 향한 구조적인 토대가 형성되어 이미 고착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정수열, 2015).

〈표 1〉은 사회구성의 중요한 범주인 직업, 지위, 교육, 주택, 소득,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각 영역별 계층적 지위에 대한 인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층 인식의 구조는 상층 2.8%, 중간층 55.2%, 하층 42%로 구성되어 이전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각 부문별 차원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남성에서 중간층 비중이 높다고 여기는 반면에 여성에서는 하층이 좀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중간층 분포가 이전에 비해 점점 높아지

고 있다. 직업면에서는 전문 관리직에서 중간층(74.3%) 및 상층(7.1%)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2010년에는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사무직에서 가장 높았지만 10년 뒤에는 상층(1.1%)과 하층(2.5%)으로 조금씩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판매직이나 농어업에서는 중간층이 하층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기능노무직에서는 중간층(46.9%)보다 하층(52.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모든 지위에

표 1. 계층의식의 구성(%)

부문		상	중	하
성별	남자	3.2(3.1)	59.6(59.1)	37.2(37.8)
	여자	1.8(1.1)	42.8(40.2)	55.5(58.7)
직업	전문관리	7.1(8.5)	74.3(75.9)	18.6(15.6)
	사무	4.3(3.2)	73.3(76.9)	22.4(19.9)
	서비스판매	2.1(1.6)	55.3(58.2)	42.6(40.1)
	농어업 기능노무	2.7(1.6) 0.9(0.7)	59.8(50.5) 46.9(45.0)	37.5(47.9) 52.1(54.3)
지위	고용주	7.2(9.9)	73.3(74.9)	19.5(15.2)
	임금근로자	3.0(2.6)	59.5(59.8)	37.5(37.6)
	자영자	2.1(1.7)	55.7(54.3)	42.2(43.9)
교육	초졸이하	0.7(0.5)	29.9(28.7)	69.5(70.8)
	중졸	1.4(0.8)	39.4(39.4)	59.2(59.9)
	고졸	1.5(1.4)	51.3(52.6)	47.1(46.0)
	대졸이상	5.1(5.7)	71.7(75.2)	23.2(19.1)
주택	자가	3.1(3.6)	62.9(61.0)	34.0(35.4)
	전세	3.3(2.0)	57.6(54.7)	39.0(43.3)
	월세(보증금)	2.1(0.6)	37.1(37.6)	60.8(61.8)
	월세	0.4(0.4)	23.1(28.8)	76.5(70.8)
소득	100만원 미만	0.8(0.5)	25.6(31.3)	73.6(68.2)
	100만원-200만원	1.4(0.7)	40.3(44.1)	58.2(55.2)
	200만원-300만원	1.3(1.4)	54.0(63.5)	44.7(35.1)
	300만원-400만원	1.6(2.9)	65.5(74.1)	32.9(23.0)
	400만원-500만원	2.3(4.4)	77.1(83.0)	20.6(12.6)
	500만원-600만원 600만원 이상	5.1(7.3) 12.3(19.3)	81.8(84.2) 79.7(73.9)	13.1(8.5) 8.0(6.9)
만족	만족	7.7(9.1)	75.6(77.0)	16.7(13.9)
	보통	1.2(1.3)	58.2(64.7)	40.6(34.0)
	불만족	0.5(0.5)	26.0(30.0)	73.5(69.5)
총계		2.8(2.7)	55.2(54.9)	42.0(42.4)

출처: 통계청(2020). <사회조사> 재구성; 괄호 안은 2010년 자료.

서 중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전에 비해 하층의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고용주에서 상층(7.2%)과 중간층(73.3%)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비해 자영자에서는 하층비율(42.2%)이 높으며 임금근로자는 중간에 위치하여 변동의 폭도 가장 낮다.

교육면에서는 대학교 졸업자들이 중간층이라고 응답하는 비율(71.7%)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하층(69.5%)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시간 축을 따라서 고졸 및 대졸에서 하향 이동의 경향을 나타내는 데 비해 중졸 및 초졸 이하에서는 약간의 상승이동의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택 및 소득 차원에서 계층의식은 자산정도와 비례하며,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이 되는 집단에서 스스로 상층이라고 여기는 비율(12.3%)이 전 부문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가장 열악한 여건인 월세거주나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하층의 비율이 각각 76.5%와 73.6%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구조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더욱 심화된 경향을 보여준다. 계층에 대한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주관적 차원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계층의식은 모든 수준에서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83.3%가 중간층 이상이라고 자신을 인지하는 데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99.5%가 중간층 이하라고 여기고 있다. 특히 만족도 수준에 상관없이 이

전에 비해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할 수 있다.

표 2. 계층의 지위일치비율(%)

		주관적 차원			
		상	중	하	소계
객관적 차원	상	8.7	80.7	10.6	100
	중	1.5	59.7	38.8	100
	하	1.1	33.0	65.9	100

출처: 통계청(2020). <사회조사> 재구성.

<표 2>는 계층구조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계층별 평균 지위일치비율은 44.7%에 이르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중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59.7%)이 자신을 중간층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상층과 하층에 속한 사람은 각각 8.7% 및 65.9%의 일치비율을 보여주며, 상층에서는 80.7% 및 10.6%가 중간층 또는 하층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중간층의 1.5% 및 38.8%는 자신을 각각 상층 및 하층이라고 여기며, 하층에 속한 사람은 1.1% 및 33.0%가 자신을 상층 또는 중간층이라고 인지한다. 이러한 계층적 지위일치의 구성은 삶에 만족도에서와 같이 계층구조의 양극화를 함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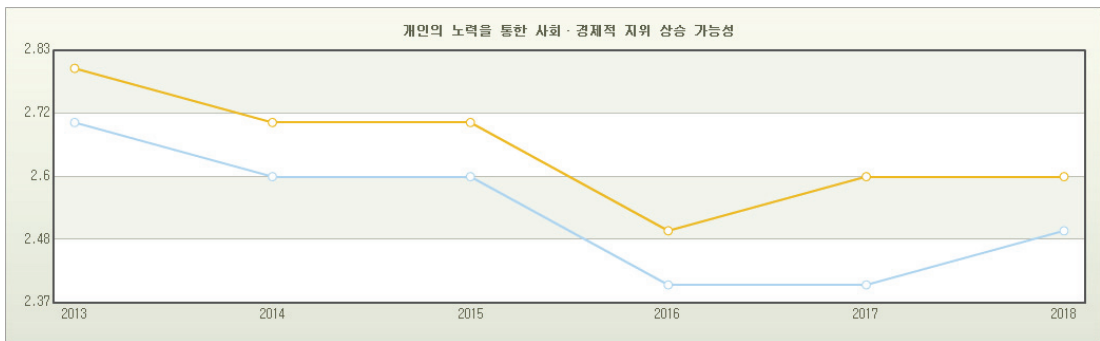


그림 2. 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

각주: 하늘색: 자신; 노란색: 자녀.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계층이동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림 2>를 살펴보면, 본인의 경우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에서야 조금 증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계층이동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배 정도 낮으며, 2016년에는 3배의 격차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녀의 경우에도 기대치는 본인보다 높지만 거의 동일한 유형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젊은 층에서 계층이동 가능성을 높게 본 비율이 2013년 53.2%에서 2017년에는 38.4%로 14.8% 감소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면서 다음 세대의 계층이동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발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주관적 계층의식은 상향보다는 하향이동의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는 계층간 이동보다는 계층내 분절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불평등 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상층의 패쇄성, 중간층의 유동성, 하층의 차단성 등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조희연외, 2009).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OECD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소득이동성

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불평등과 이동 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하겠다. 사회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한국은 높은 교육열로 계층상승의 욕구를 가짐으로써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활발한 교육 이동성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요소가 직업이동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함께 성별 및 연령별 고용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에 기인하고 있는데, 점차 증가하는 비정규직에는 출산 및 육아와 명예퇴직 등으로 여성과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25.5%)은 OECD 국가 중에서 5위(570만 명)로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으며, 주로 음식, 숙박 등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어 불경기애 의한 계층의 하락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악화일로에 있으며, 그 여파는 복합적이면서도 다층적인 악순환 구조를 배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동제한 강도에 비례하여 생산 및 소득의 감소가 나타난다. 둘째, 실물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 체 및 사업체 등이 위축되고, 금융부실 및 심리적 공포를 초래하여 경제위기에 봉착하는 중산층이 더욱 증가한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일수록 감염확산의 속도가 높아지며,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은 도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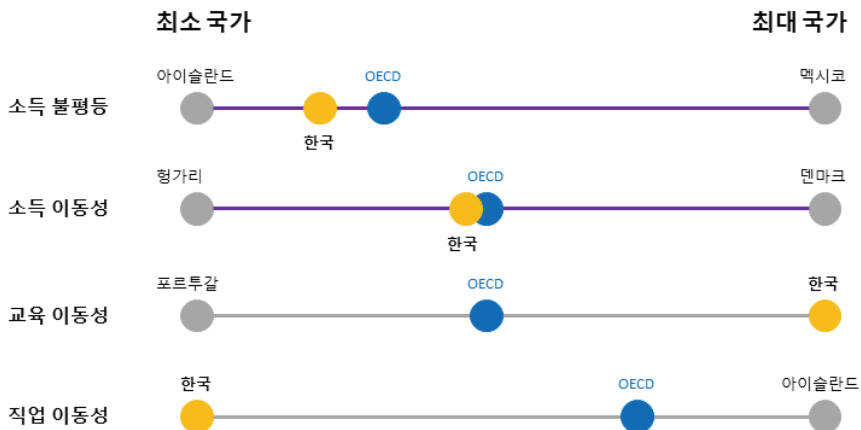


그림 3. 소득불평등과 계층이동성의 국제비교
출처: OECD(2019). <A Broken Social Elevator?>.

받기가 어려워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갈등도 확산된다. 실제로 2020년 5월 기준으로 불완전 취업자 규모는 공식적인 실업자 127만 명의 3배인 3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임시 및 일용직 일자리는 65만 개 이상이 줄어들고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도 20만 명이 일 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2020년 2월과 비교해서 전체 취업자 감소 규모인 87만 명에서 51만 명이 여성이며 고령자 및 청년 실업의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통계청, 2020).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계층과 상관없이 다가오지만 전파력의 파급효과는 계층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방역의 상대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향후 발전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코로나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 갈등이 줄어들어 총동적 자살률은 감소할 수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 코로나 이전부터 누적된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중첩되면서 자살률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K-방역의 방법과 효과에 관해서 사회집단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상은 재난지원금에 관한 보편 및 선별 지원방식에서 나타나듯이 이념 및 지역 갈등과 함께 계층갈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계층구조의 토대에서는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계 빚이 급증하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2020년 1분기 가계부채는 1,611조 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은행권의 연체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험신호를 알 수 있다. 이는 부실채권으로 이어져 금융권 기반이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한국은행, 2020). 대응방안에서도 생계를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빚만 늘릴 수 있으며, 정부는 생활비 지원이나 제세공과금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채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늘어나며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46.7% 수준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 2020).

3. 해결방안의 단초를 찾아서

계층갈등의 역사적 사례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렵고 때로는 해석의 오류를 범할 위험도 내포한다. 그럼에도 인과관계 면에서 갈등해소의 출발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과 권력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상호 관계가 공정성을 위반하는 경우 제도적 모순과 국가적 위기의식에 의한 개혁의 필요성을 배태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적 요인으로 제도적 붕괴가 심화되고 사회질서가 혼란할수록 갈등해결을 통한 유토피아의 종착점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개혁이 표방하는 이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에 반비례하여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줄어든다(Goldthorpe, 1996). 대부분 분쟁은 잠재적 및 현재적 유형이 혼합된 성격을 갖는데, 이로 인해 해결지향인가 아니면 기존질서로의 회귀인가를 둘러싼 노선갈등을 가져와 갈등해결의 사회적 연대를 와해시킨다. 갈등해결의 과정에서는 갈등주체들의 소통방식과 효과의 범위 등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공동체의 반격 자체가 개혁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시키기도 하지만 사회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림 4〉에서 제시하듯이 한국사회에서 집단별 소통수준은 가족, 직장, 이웃, 세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및 직장에서의 소통이 증가하는 데 비해 세대간 소통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최근의 세대 갈등의 심각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2013년 13.1%에서 2018년 18.7%로 증가하였으며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같은 기간 20%에서 11.6%로 감소함으로써 2016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후자보다 전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적 권위에 기초한 공동체적 유대감보다 개인의 자유와 능력에 의존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갈등조정 성공여부를 막론하고 대부분 개혁은 내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공통적이다. 성공한 개혁은 체제 내부에 적을 양산시켜 개혁대상의 규모가 커질수록 개혁연대의 기반은 축소될 위험이 존재한다. 내부의 심각한 균열로 개혁을 주도한 집단은 반대세력의 공격목표가 되어 갈등해소가 역설적으로 개혁연대의 축소를 요구하게 된다(Mayer, 2009). 따라서 갈등을 해결과정에서 당면하는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개혁연대의 축소는 전략 프로그램의 수정으로 이어지고 개혁의 후퇴를 초래하여 갈등조정 가능성 저해하기 때문이다.

계층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은 사회구성원의 광

범위한 지지와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지만, 근본적인 단초는 해결과정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의 유대감을 되찾을 문화적 가치체계의 확립에서 찾을 수 있다(장원호·정수희, 2019).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계층갈등을 해소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관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감대와 연계되어 발전전망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 된다(Halpern and Weinstein, 2004). 그러므로 계층갈등을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의 각 영역에서 배양하고 또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새롭게 설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계층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평가는 교육계, 시민단체,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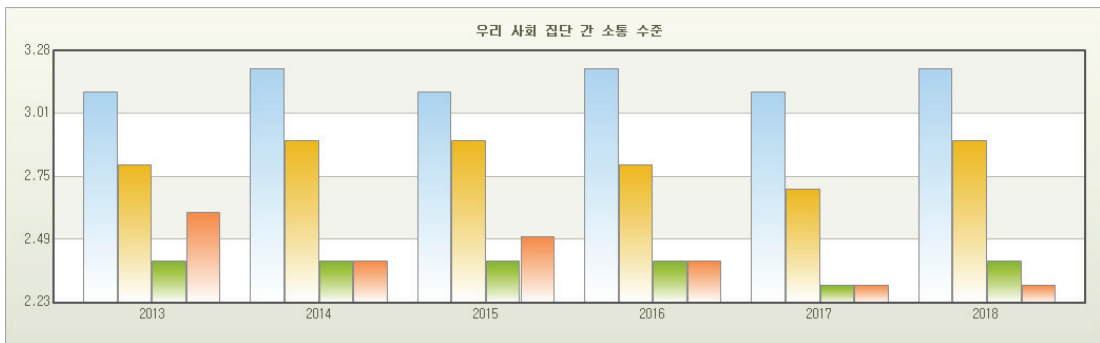


그림 4. 집단별 소통수준

각주: 하늘색: 가족; 노란색: 직장; 연두색: 이웃; 주황색: 세대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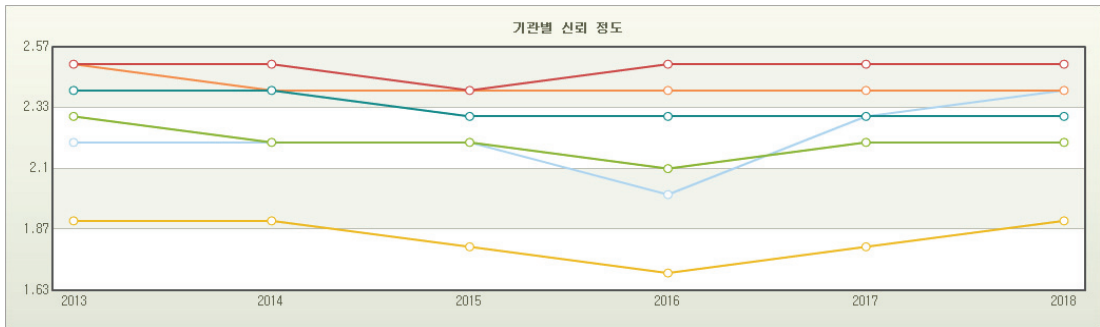


그림 5. 기관별 신뢰수준

각주: 빨간색: 교육계; 주황색: 시민단체; 바다색: 신문사; 연두색: 법조계; 하늘색: 정부부처; 노란색: 국회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사, 법조계, 정부부처, 국회의 순서로 구성되며, 이는 <그림 5>에서와 같이 기관별 신뢰수준의 분포와 일치한다. 사회갈등 해결에 관한 정부부처의 역할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국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기대와 신뢰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

계층갈등은 경제적 혜택 및 특권을 일부 계층이 지나치게 독점하는 데 대한 반발로서 상대적 좌절감의 정도가 심하게 뒀에 따라 갈등의 양상도 과격한 모습을 갖게 된다. 물론 기득권 중심의 사회 자체가 계층갈등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공공선과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상실하고 구성원 및 집단의 공감대가 무너질 때 계층갈등은 강하게 발생하고 진행된다(Throop, 2010).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불만, 불안, 불신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저항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반격인 것이다. 사회구성원이 요구하는 기대와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시스템 속에서 현실적인 격차에서 파생하는 괴리감과 좌절감이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기저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강한 비판, 기득권 계층의 독점 및 부도덕성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 및 도덕성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내재되어 갈등의 공간적 확장이 지속된다.

아울러 갈등 당사자 외에 계층갈등의 효과는 외부성을 지닌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 사례는 실제로 갈등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층갈등의 감춰진 영역인 불평등구조는 표출된 영역보다 갈등의 이면에서 더 크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은 갈등에 관한 인지적 차원에 속한 것이지 갈등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계층갈등은 사회문화적인 문제이지만 최근의 갈등문제는 주로 제도적 수준에서 인지된다. 제도적 개혁은 갈등에 대한 단기적 해결방법이며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Komesar, 2001). 국가수준에서 갈등해결의 지속성은 어떤 가치체계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적 토대로서 공동체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과 함께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두는 공감사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서문기, 2019).

4. 결론 및 함의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사회구성원에게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성취한 파이를 불공정하게 분배하여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 특혜가 편중되는 불평등구조가 심화되고 확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실질적인 갈등은 전통적인 이념이나 가치의 추상적인 대립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여 급기야 사회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미래의 전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Suh, 1998).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불평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에게 고통분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사회 환경도 개인주의 가치체계를 극대화시켜 교육 편중과 분배왜곡의 변곡점이 되었으며, 공공연히 이루어져 오던 정경유착 및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불법·변칙 증여도 자신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면 가능하다는 시대추구(rent-seeking)의 경향이 정착,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상위권의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분배구조와 굴절된 사회가치에 의해 소득 및 계층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교육격차와 계층고정으로 이어져 상승이동이 구성원의 자질과 노력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점점 더 구조화되어 구성원에게서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정재훈·김경민, 2014). 그 결과 공동체의 사회적 유대감은 붕괴되고 대신 사회구성원이나 집단의 상호 대립과 차별을 배태하여 갈등을 지속시키고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의 교육격차는 기회 균등이나 제도적 공정성만으로는 이미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으며 공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의 가치체계 자체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으로부터 벗어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사회 및 고용 안전망을 기반으로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경쟁체제와 낙수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불평등의 심화와 계층갈등을 초래하였던 신자유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의료 및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여 경제적 혼란과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의 초(超) 세계화에서 느린 세계화 또는 역(逆) 세계화가 도래할 전망이다. 국경폐쇄와 수출규제 등 자국의 생존에만 집중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으로 각국은 생산기반을 재정비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질서와 함께 대중영합주의 및 국수주의에 기초한 반(反) 세계화의 흐름이 충돌하는 지형에서 방역공조 및 기후변화 대응, 금융안정 및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사태로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 소비, 행정, 의료, 교육, 복지 등이 원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활용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기의 혜택을 계층별로 골고루 분산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차원이 아닌 제도 및 문화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도 필요하다.

위기극복과정을 통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정합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극명하게 노정되는 이념갈등의 이면에는 계층갈등의 본질이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건강, 안전, 삶의 질을 우선시키고 고용 및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 및 인권 등의

가치가 공동투자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갈등해결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한 기존의 발전경로를 근원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설계와 재정투입이 시급하며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경제와 글로벌 및 디지털 차원의 혁신과정을 통해 국가발전보다 사회 발전을 우선시키고 구성원의 삶 자체를 중시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지형은 현재 권력의 부정부패를 바탕으로 미래 권력이 대신하는 과정이며, 양자 간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 악의적 비난과 분쟁을 통해 급기야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주체로부터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이에 따라 정치권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오단계를 지나 무관심한 상태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현란한 구호의 홍수 속에서 개혁이 사회구성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개혁의 한계를 접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계층문제는 발전과정상 문제의 차원이 아닌 위기의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생활세계와 미래전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또는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으며, 위장자 및 관련부서 수장에서 정책담당자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간다. 더욱이 청문회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주축이 되고 편중된 권력이 옹호되는 경우 정부신뢰는 추락하기 마련이다. 언론의 경우도 개혁의 주체인 양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라는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계층갈등 자체는 역설적으로 인간적 삶의 조건으로서 사회발전의 핵심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발전의 개념이 특정 집단이나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없는 가치함의를 내포한다면, 그 본질은 단순히 사회 각 부문별의 외형적인 성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정의의 차원에서의 문화적 가치

에 관한 것이다. 경제적 부의 증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공정한 분배과정의 왜곡으로 빈부 격차를 증가시킨다면,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부의 축적인가?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의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절차적 과정의 공정성 및 자율과 합의라는 민주적 가치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가? 코로나 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강자 모두의 권리와 삶이 존중되고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정서적 감성을 함께 하는 나눔의 사회를 향한 틀은 준비되었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계층갈등의 탈(脫)이념화와 탈(脫)구조화를 촉진시키고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함의한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정합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회구성원 및 집단의 다원화, 분권화, 유연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추구하고는 공감사회로의 전환이다(Rifkin, 2010).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실천의 포용력이 요구되며 구성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공론에 부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구조적 개방성이 요구된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통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며, 생활세계에서의 자발적 실천운동은 개혁의 한계를 극복하는 잠재력이 될 수 있다(안효미·남기범, 2019). 감성의 공유를 통한 협동이라는 공감사회의 지향점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확산시킨다면, 근원적인 갈등해소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참다운 삶의 세상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미·한준, 2007,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소득불평등 분해, 1998-2005,” 한국사회학 41(5), pp.35-63.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pp.195-218.
 서문기, 2014,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계층갈등,” 국제지역연구 23(1), pp.27-52.

서문기, 2019, “사이버공간과 글로벌 공감사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pp.111-122.
 신광영, 2013, 한국 사회 불평등연구, 후마니타스.
 안효미·남기범, 2019, “자선에서 연대로, 동정에서 공감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의 사례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pp.141-159.
 이재열, 2019,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21세기북스.
 장원호·정수희, 2019, “도시의 문화적 공감대로서 콘텐츠의 인식: 콘텐츠 투어리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pp.123-140.
 장원호·김동윤·서문기, 2019, 공감, 대한민국을 바꾼다, 푸른길.
 정재훈·김경민, 2014, “교육의 공간 불평등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2), pp.385-401.
 정준호, 2019,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의 요인분해,”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2), pp.196-213.
 조희연·김동춘·오유석 편, 2009,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 연구, 한울아카데미.
 기획재정부, 2020, 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
 통계청, 2020, 사회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최종열람일: 2020년 8월 15일).
 한국은행, 202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일보, 2018, 한국 사회갈등 설문조사,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최종열람일: 2019년 10월 15일).
 Acemoglu, D. and Robinson, J., 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Y: Crown Publishing.
 Alvaredo, F., Chancel, L., Piketty, T., Saez, E. and Zucman, G., 2018, *The World Inequality Report*, World Inequality Lab, <https://wir2018.wid.world/>(accessed on 20 August 2020).
 Bevir, M., 2006, “Democratic Governance: Systems and Radical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3), pp.426-36.
 Bowles, S. and Gintis, H., 1998, *Recasting Egalitarianism: New Rules for Communities, States and Markets*, NY: Verso.
 Gallup, 2019, *Global Well-Being Report*, Washington, D.C.:

- Gallup Poll.
- Goldthorpe, J., 1996, "Class Analysis and the Reorientation of Class Theory: The Case of Persisting, Differentials in Educational Attainment,"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3), pp.481-505.
- Halpern, J. and Weinstein, H., 2004, "Rehumanizing the Other: Empathy and Reconciliation," *Human Rights Quarterly* 26(3), pp.561-583.
- Helliwell, J., Layard, R. and Sachs, J.(eds.), 2019, *World Happiness Report*, NY: U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Komesar, N., 2001, *Law's Limits: The Rule of Law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yer, B., 2009, *Staying with Conflict: A Strategic Approach to Ongoing Disputes*, San Francisco: Jossey-Bass.
- Mueller, D., 1997, *Perspectives on Public Cho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e, J.,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ECD, 2019,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war, M. and Cox, D.(eds.), 2013, *Social Development: Critical Themes and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Rifkin, J., 2010,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 Roemer, J., 1998,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ellenburg, J., 1982, *The Science of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apiro, T., 2000, *Great Divides, Mountain View*, NY: Mayfield Publishing.
- Suh, M., 1998, *Developmen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NY: Praeger.
- Throop, J., 2010, "Latitudes of Loss: On the Vicissitudes of Empathy," *American Ethnologist* 37(4), pp.771-782.
- Weller, M. and Wolff, S., 2009, *Autonomy, Self-governance and Conflict Resolution*, London: Routledge.
- Wilkinson, R. and Pickett, K., 2010,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Always Do Better*, London: Allen Lane.
- Williamson, O., 1996, *The Mechanism of Governa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Yarn, D., 1999, *Dictionary of Conflict Resolu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교신: 서문기, 06978,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전화: 02-820-0047/0495, 이메일: mgsuh@ssu.ac.kr
- Correspondence: Moon-Gi Suh,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Tel: 82-10-7759-8809, E-mail: mgsuh@ssu.ac.kr

최초투고일 2020년 09월 08일

수정일 2020년 09월 21일

최종접수일 2020년 09월 22일